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수영구보

호외 제350호 2015.5.06(수)

○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조례-----	9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29
○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3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0
○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7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 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6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72

회 람								
--------	--	--	--	--	--	--	--	--

· 발행 : 수 영 구

· 편집 : 문화공보과 (610-4071~3)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6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

1. 노상주차장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2조의2 중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제8조의2)
 - 노상주차장
 -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 노상주차장
 -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수방법”을 “관리방법”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대리자 분임자의”를 “분임자의”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구본청의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를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인의 재료, 인영의 색깔, 내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조제2항 중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하고자”를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하고자”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인대장) 민원여권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의하여”를 “날인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마멸되거나”를 “닳거나”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관수자”를 “관리자”로 하고, “의한”을 “따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의 관수자”를 “공인의 관리자”로 하고, 제1항 중 “관수자는”을 “관리자는”으로 “자가 관수자가”를 “사람이 관리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관수자가”를 “관리자가”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방법”을 “공인의 보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수자”를 “관리자”로 한다.

별표1의 공인의 구분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 인 의 구 분	길이	모 양
2.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담당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cm	정방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	정방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조개각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제3조)

- 회계 관직 명칭 변경사항 반영

(경리관 → 재무관, 재무관리관 → 부재관리관)

나. 공인의 글씨 및 규격(제4조)

- 한글전서체 →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글자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의 자가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경관관리는 법 제3조에 따라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

로 한다.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경관관리의 종합적인 시책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 대상지역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보전 및 관리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등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자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물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제1항에 의거 제출된 도서의 적정성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중·장기적 도시경관시책의 추진체계
4.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경관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 및 주변 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 경관관리계획
7. 예술성·조화미 평가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

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①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노후·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수영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공사용 임시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른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5호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

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사업추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 공무원은 재직위원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고, 구의원 및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⑩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철회하거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해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시범 지역·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

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50% 이내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와 야간경관개선사업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특정구역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제1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는 사항
2.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소위원회 심의 결과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
5.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내로 한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경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3.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5. 소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별표1의 도시시설물

나. 별표2 및 별표3의 건축물 중 10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4조, 제25조에 따른 심의대상 중 부산광역시에서 설계·시행하거나 승인·인가·허가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 및 영 제 22조제2호에서 지정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각각 심의 자문을 거친 경우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을 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경관위원의 위원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이 제30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심의를 받았거나 계획 수립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도시시설물(제24조제1호 관련)

분 류	시 설 물 종 류	비 고
도 로 시설물	가. 폭 25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의 보도 (자전거 도로 포함) 나. 폭 25m 미만인 도로에 설치하는 길이 50m 이상 석축, 옹벽, 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차도 경계석 (볼라드 포함) 및 헨스 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도로 부속 시설물	가. 폭 25m 미만인 도로(변)에 설치하는 20주 이상의 가로등 (배전함 포함) 및 각종 전주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가로 녹지시설	가. 20조 이상의 가로수 보호덮개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교통 관련 시설	가. 안내표지판(도로명판, 방향유도판, 관광표지판 및 안내도 포함) 나.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다.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편의 시설	가. 10개 이상의 벤치, 의자 나. 파고라 다. 10개 이상의 휴지통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현수막게시대, 지정벽보판, 고정형 행정광고물 나. 동상,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다. 벽화, 수퍼 그래픽(Super Graphic)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한다.

[별표 2]

공공건축물(제25조제1호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신축

- 1) 공공청사 (구청, 동, 보건소, 도서관 등)
- 2) 공공문화 및 집회시설(관광, 공연, 전시, 관람, 집회 등을 위한 시설)
- 3) 복지 및 교육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 4) 환경관리시설 (공중화장실)
- 5)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나. 가의 1)부터 5)까지 중 증축 또는 설계변경으로 외관디자인이 변경되는 건축물
(※ 외관디자인 : 건물 외부마감재 또는 건물 형상 등)

다. 공원(삼지공원포함), 광장, 운동장, 어린이놀이터, 분수대

라.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한다.

[별표 3]

일반건축물(제25조제2호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경관위원회 심의 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10 이내의 건축물, 또는 2개층 이하의 증가 또는 축소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6층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주요간선도로 3층 이상)

나. 해안(수영강 포함)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해안과 대지의 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

※ 1.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한다.

2. 주요간선도로 : 수영로, 광안해변로, 광남로, 과정로, 연수로, 좌수영로, 광안로, 감포로, 황령대로

◆ 제정이유

-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내용 등(제6조~제8조)
- 나.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제9조~제14조)
- 다.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제15조~제23조)
- 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제24조~제25조)
- 마. 공동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제29조~제3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6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납세 담보제공 예외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가. 납세담보 요구의 제한(제12조제1호)**

-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시 납세 담보제공의 예외 사유를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영 제8조제2항으로 개정

나.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제25조제3항)

-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10일간 공고 ⇒ 1개월간 공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하여”를 “대해서는”으로 하고, “제38조제4항에 따라”를 “제38조제4항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75(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50

제4조 중 “2014년 12월 31일 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①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이하 이 조에서 “부산항만공사”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부산항만공사가 「국유재산법」에 따른 현물출자로 인한 출자증가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2015.01.01)에 따라 감면시한의 연장 및 경감세율을
등을 조정하고, 지방세 감면을 일부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제2조)

-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75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

-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 100분의 50

나.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제4조)

-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100분의 70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다.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제8조)

라. 부산항만공사에 대한 감면 신설(제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7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물놀이구역”이란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수상레저구역”이란 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수탁자”란 구청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일부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유관기관”이란 해수욕장 질서유지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관계 기관으로서 교육청, 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비안전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제3조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용·관리하여야 한다.

1. 해수욕장은 귀중한 공유자원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꾀한다.

2. 해수욕장은 주민 및 이용객이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한다.
3. 해수욕장 관리는 이용자인 주민 및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
4. 해수욕장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수욕장 자원이 고루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해수욕장이 사계절 친수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제5조(해수욕장의 지정) 구청장은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유관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고시한다.

제6조(해수욕장의 구역) ① 구청장은 유관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해수욕장을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 이용이나 운영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물놀이구역과 수상레저구역은 부표·안전선 등으로 구분하고 구역사이에는 15미터 이상의 완충구역을 두어야 한다.

제7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일 15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에 고시하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수욕장 안

내방송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구청장은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8조 및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구청장이 영 제8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제8조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지)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한 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수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한 경우

제12조(해수욕장 사용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수욕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 위탁관리의 경우

2. 구청장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고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해수욕장 내의 백사장을 점유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용료 산정방식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사용료는 해수욕장 사용개시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이하 “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2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15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6.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11.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47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7조(준수사항 미준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해수욕장협의회

제1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위원은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2. 부산해양경비안전서장
3. 부산지방기상청장
4. 부산남부소방서장
5. 해수욕장 운영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할 수 있다.

1.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시 의견제시
2. 수탁자의 지정·해제의 심의·의결
3.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를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도시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수욕장운영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5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 등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설해수욕장 등 시설물의 사용료 및 대여료 징수 조례

[별표 1]

해수욕장 사용료 산정방식(제12조 관련)

구 분	산 정 방 식 (단위 : 원)
1. 일반기준	사용면적(㎡) × 토지가격 × 200/1000 × 사용일수
2. 감경기준 (공익법인)	사용면적(㎡) × 토지가격 × 50/1000 × 사용일수
3. 사용료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2. 해수욕장 개장기간 이외의 비영리목적의 행사로 구청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

비 고

1. "토지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당시의 다음 각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값으로 정한다.

남천동 509-5, 광안동 282-3, 광안동 281-10, 광안동 281-12, 광안동 281-9, 광안동 281-6, 광안동 280-35, 광안동 261-1, 광안동 1306-2, 광안동 260-2, 민락동 744-2, 민락동 209-2

2. 사용료를 정할 때에 1일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일할(日割)로 계산한다.
3. 사용료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별표 2]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대 여 품 목	요 금 기 준	비 고
파 라 솔	1회 1개당 10,000원 이하	대여
갈대파라솔	1회 1개당 20,000원 이하	대여
샤 워 장	1회 3,000원 이하	대여
옷 보 관 함	1회 1개당 5,000원 이하	대여
비 치 베 드	1회 1개당 30,000원 이하	대여
부 기 류	1회 1개당 10,000원 이하	대여
돛 자 리	1개당 10,000원 이하	판매
기 타	해수욕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	대여 및 판매

※ 기타 :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해수욕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품

◆ 제정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 12. 4.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해수욕장 개장기간(시간) 및 그 제한의 고시에 관한 절차·방법(제7조)
- 나.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제9조)
- 다.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제10조) 및 해지(제11조)
- 라. 해수욕장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제12조)
- 마.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제13조, 제14조)
- 바.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이용제한 조치(제15조~제17조)
- 사.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제18조~제26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77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35명”을 “5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24명”을 “531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직급별 총계란 “535”를 “542”로 하고, 일반직 계란 “532”를 “539”로 하며, 6급 이하 소계란 “495”를 “50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 구정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도 기준인건에 반영된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등 증원인력 7명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제2조)

- 공무원 정원의 총수 : 535명 ⇒ 542명
- 집행기관의 정원 : 524명 ⇒ 531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별표 3)

- 총 계 : 535명 ⇒ 542명(증 7명)
- 일반직 계 : 532명 ⇒ 539명(증 7명)
 - 6급이하 계 : 495명 ⇒ 502명(증 7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로 하며, “기간동안에는 이를”을 “기간에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별지 제1호”를 “별지 제1호서식의”로 하고,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청서 제출 시 감면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 중 “별지 제2호”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하고, “제출하여야”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로 하며, “별지 제3호”를 “별지 제3호서식의”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 개정이유

- 수영구 야외상설무대 인터넷 예약 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근거 마련 및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부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료 감면, 반환 방법 등 개정(제2조~제3조의2)
- 나. 쓰레기처리비용 조항 삭제(제5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설·조정되는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법개정에 따른 전결사무 정비 및 전결권 조정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등록(국장→과장)
-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계획 수립(국장→과장)
- 민방위 계획 수립(국장→구청장)
- 옥외광고물 허가 중 옥상간판, 빗점멸·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장→국장)

나. 신규 및 기존사무의 전결사항 누락에 따른 전결사항 정비

- 통합사례관리 업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지원, 협동조합에 관한 사항, 할부거래 과태료 부과 등

다. 현재 수행하지 않는 사무전결권 폐지

- 유해화학 물질관리 및 지도단속 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51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란의 제21호를 삭제한다.

같은 표의 재무과 분장사무란의 제13호 중 “구 청사(구의회·보건소·동사 포함)”을 “구 청사(구의회·동사 포함)”으로 한다.

같은 표의 세무과 분장사무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 수입증지 사무

42. 세외수입 일반회계(과년도분)

같은 표의 청소행정과 분장사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6. 폐기물 처리신고 및 지도감독

같은 표의 환경위생과 분장사무란의 제39호를 삭제하고,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52.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사항(어린이집, 공원, 공동주택 등 제외)

53.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5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사항

55.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같은 표의 지역경제과 분장사무란의 제8호를 삭제하고, 제107호부터 제10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7. 할부거래(과태료) 관련 업무

108. 도시 농업에 관한 사항

109. 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

같은 표의 안전관리과 분장사무란의 제30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항

같은 표의 건축과 분장사무란의 제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8.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같은 표의 건설과 분장사무란의 제2호 중 “국, 공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을 “국유재산(국토교통부 소관),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하고, 제8호 중 “사유행정재산”을 “국유재산, 공유재산(행정재산)”으로 하며, 제106호부터 제10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6. 도서관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107. 전기용품에 관한 사항(과태료 부과·징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같은 표의 보건소 분장사무란의 제23호 및 제24호, 제3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각각 하고, 제36호 중 “법정전염병”을 “법정감염병”으로 하며,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3. 시설의 운영 및 관리(기전시설 포함)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신설사무를 추가하고 부서간 불분명한 사무구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 제개정 및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사무조정예 따라 관련 부서에 사무 반영

- 세외수입 일반회계(과년도분),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나. 법개정 등에 따른 신설업무 및 기 분장되었으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무 반영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 농업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사항
- 연안체험활동 신고에 관한 사항
- 전기용품에 관한 사항 등

다. 상위법령 개정예 따른 사무이관 등 사무폐지

- 복권발행에 관한 사항 등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총 계		542	385	11	35	14	97
정무직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계		539	383	10	35	14	97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2	17	2	3		10
행정사무관		20	10	2			8
의무사무관		2			2		
시설사무관		3	3				
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1				1
행정·시설사무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사무관		1					1
행정보건환경사무관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사무관		1			1		
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6급 소계		129	110	1	4	3	11
행정주사		78	69	1		1	7
세무주사		13	13				
사회복지주사		5	4				1
사서주사		1				1	
공업주사		1	1				
녹지주사		1	1				
간호주사		1			1		
전산주사		1	1				
방송통신주사		1	1				
환경주사		1	1				
시설주사		6	6				
행정·사회복지주사		5	2				3
행정·공업주사		2	2				
행정·보건주사		4	2		2		
행정·시설주사		2	2				
행정·방송통신주사		1	1				
행정·해양수산농업주사		1	1				
행정·공업·환경주사		1	1				
약무·보건·의료기술주사		1			1		
운전주사		1	1				
기계운영주사		1				1	
사무운영주사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7급 소계	160	120	3	12	3	22
행정주사보	81	63	2	1	1	14
세무주사보	11	11				
사회복지주사보	15	7				8
전산주사보	2	2				
사서주사보	2				2	
공업주사보	4	4				
녹지주사보	2	2				
행정·수의주사보	1	1				
해양수산주사보	1	1				
보건주사보	3	1		2		
식품위생주사보	2	2				
의료기술주사보	3			3		
약무주사보	1			1		
간호주사보	5			5		
환경주사보	2	2				
시설주사보	14	14				
방송통신주사보	2	2				
환경·보건·공업주사보	1	1				
운전주사보	4	4				
선박기관운영주사보	1	1				
사무운영주사보	3	2	1			

기관별 직급·직렬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8급 소계	143	93	2	10	6	32
행정서기	66	39	1	1		25
세무서기	8	8				
사회복지서기	13	6				7
속기서기	1		1			
전산서기	4	3			1	
사서서기	3				3	
공업서기	7	6		1		
녹지서기	2	2				
해양수산서기	1	1				
보건서기	3	1		2		
식품위생서기	1	1				
의료기술서기	1			1		
간호서기	3			3		
시설서기	13	13				
방송통신서기	2	2				
행정·보건서기	1			1		
행정·환경서기	1	1				
공업·방송통신서기	1	1				
보건·간호서기	1			1		
환경·공업서기	1	1				
행정·방송통신서기	1	1				
운전서기	3	3				
전화상담운영서기	1	1				
전기운영서기	1	1				
기계운영서기	2	2				
사무운영서기	2				2	

직급·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9급 소계		70	39	2	5	2	22
행정서기보		35	21		1	1	12
세무서기보		4	4				
사회복지서기보		15	5				10
속기서기보		1		1			
사서서기보		1				1	
보건서기보		1			1		
식품위생서기보		1	1				
시설서기보		3	3				
방송통신서기보		1	1				
운전서기보		6	3	1	2		
전화상담운영서기보		1	1				
보건운영서기보		1			1		
별정직 계		2	1	1			
5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전문위원)		1		1			
6급상당 소계		1	1				
행정·별정직 (비서요원)		1	1				

※ 비고 : 별정직 정원은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 정원을 포함한다.

◆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2015년 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업무추진 인력을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여 직급 직렬별 정원을 조정함

◆ 주요내용

가. 총계란 중 총계 535 ⇒ 542, 구본청 378 ⇒ 385

나. 일반직 정원 조정 사항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일반직 계	532⇒539	376⇒383	10	35	14	97
6급 소계	127⇒129	108⇒110	1	4	3	11
행정주사	77⇒78	68⇒69	1		1	7
세무주사	12⇒13	12⇒13				
7급 소계	159⇒160	119⇒120	3	12	3	22
사회복지주사보	14⇒15	6⇒7				8
8급 소계	142⇒143	92⇒93	2	10	6	32
사회복지서기	12⇒13	5⇒6				7
9급 소계	67⇒70	36⇒39	2	5	2	22
행정서기보	32⇒35	18⇒21		1	1	12
세무서기보	5⇒4	5⇒4				
사회복지서기보	14⇒15	4⇒5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 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 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훈령 제28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 기관별·부서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원관리기관별·부서별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에 대하여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이 규정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본청 부서별 직급별·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구분청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합계		385	
기획감사실	5급	1	행정직1
	6급	10	행정직10
	7급	8	행정직6, 사회복지직1, 시설직1
	8급	5	행정직5
	9급	1	행정직1
	소계	25	
총 무 과	정무직	1	정무직1(구청장)
	3급	1	행정직1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6, 전산직1,
	7급	11	행정직8, 전산직2, 운전직1
	8급	8	행정직5, 전산직3,
	9급	3	행정직1, 운전직2
	별정직	1	6급상당1(행정·별정직)
	소계	34	
문화공보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5
	7급	5	행정직5
	8급	4	행정직2, 공업·방송통신직1, 기계운영직1
	9급	1	행정직1
	소계	16	
재 무 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4, 방송통신직1
	7급	3	행정직2, 방송통신직1
	8급	7	행정직2, 방송통신직2, 공업직1, 기계운영직1, 전화상담운영직1
	9급	1	전화상담운영직1
	소계	17	

구분청 부서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세 무 과	5급	1	행정직1
	6급	13	세무직13
	7급	10	세무직10
	8급	8	세무직8
	9급	4	세무직4
	소계	36	
민 원 여권과	5급	1	행정직1
	6급	5	행정직5
	7급	6	행정직5, 운전직1
	8급	4	행정직4
	9급	1	행정직1
	소계	17	
주민생활 지원과	4급	1	행정직1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4, 행정·사회복지직1, 사회복지직2
	7급	9	행정직6, 사회복지직3
	8급	7	행정직3, 사회복지직4
	9급	5	행정직3, 사회복지직2
	소계	30	
복 지 서비스과	5급	1	행정·사회복지직1
	6급	8	행정직5, 행정·사회복지직1, 사회복지직2
	7급	7	행정직5, 사회복지직2
	8급	4	행정직2, 사회복지직2
	9급	5	행정직2, 사회복지직3
	소계	25	
청소행정과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4, 행정·공업·환경직1, 운전직1
	7급	7	행정직4, 공업직2, 사무운영직1
	8급	4	행정직3, 공업직1
	9급	1	행정직1
	소계	19	

구분 청 부 서 별	직 급 별	정 원	직 렬 별 정 원 내 용
환경 위 생 과	5급	1	행정·보건·환경직1
	6급	5	행정직2, 행정·보건직2, 환경직1
	7급	7	행정직1, 식품위생직2, 보건직1, 환경·보건·공업직1, 환경직2
	8급	4	행정·환경직1, 환경·공업직1, 보건직1, 식품위생직1
	9급	1	식품위생직1
	소계	18	
지 역 경 제 과	5급	1	행정·농업·녹지직1
	6급	6	행정직3, 행정·공업직1, 행정·해양수산·농업직1, 녹지직1
	7급	9	행정직2, 행정수의직1, 녹지직2, 해양수산직1, 운전직1, 선박기관운영직1, 사무운영직1
	8급	7	행정직2, 공업직2, 녹지직2, 해양수산직1
	소계	23	
교 통 행 정 과	4급	1	기술직1
	5급	1	행정직1
	6급	7	행정직6, 행정·공업직1
	7급	8	행정직6, 세무직1, 운전직1
	8급	4	행정직2, 공업직1, 운전직1
	9급	2	행정직1, 시설직1
	소계	23	
안 전 관 리 과	5급	1	행정직1
	6급	6	행정직4, 행정·시설직1, 행정·방송통신직1
	7급	5	행정직2, 시설직2, 방송통신직1
	8급	3	행정직2, 행정·방송통신직1
	9급	2	행정직1, 방송통신직1
	소계	17	
건 축 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3
	7급	5	행정직1, 사회복지직1, 시설직3
	8급	6	행정직2, 시설직4
	9급	1	시설직1
	소계	18	

구분 청 부 서 별	직급별	정원	직렬별 정원 내용
건 설 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2, 공업직1
	7급	9	행정직1, 시설직6, 공업직2
	8급	8	행정직1, 시설직5, 공업직1, 전기운영직1
	9급	1	운전직1
	소계	24	
토지정보과	5급	1	시설직1
	6급	5	행정직2, 시설직1, 행정·시설직1, 사무운영직1
	7급	5	행정직3, 시설직2
	8급	5	행정직1, 시설직4
	9급	1	시설직1
	소계	17	
도시관리과	5급	1	행정·시설직1
	6급	5	행정직5
	7급	6	행정직6
	8급	6	행정직3, 운전직2
	9급	9	행정직9
	소계	26	

◆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사항에 맞게 정원관리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별표 1의 본청 부서별 직급별·직급별 정원조정사항에 맞게 개정

구 분	정 원		증감	증 감 내 용	
	조정전	조정후		증	감
총 계	535	542	증7	11	4
본청 계	378	385	증7	11	4
기획감사실	23	25	증2	행정6급2	
총 무 과	34	34			
문화공보과	16	16			
재 무 과	17	17	-	행정8급1	세무8급1
세 무 과	35	36	증1	세무6급1, 세무8급1	세무9급1
민원여권과	17	17			
주민생활지원과	28	30	증2	사회8급1, 행정9급1	
복지서비스과	23	25	증2	행정9급1, 사회9급1	
청소행정과	19	19			
환경위생과	18	18			
지역경제과	23	23			
교통행정과	24	23	감1		행정8급1
안전관리과	17	17	-	행정9급1	행정6급1
건 축 과	17	18	증1	사회7급1	
건 설 과	24	24			
토지정보과	17	17			
도시관리과	26	26			
의회사무과	11	11			
보 건 소	35	35			
도 서 관	14	14			
동	97	97			
남천 1동	9	9			
남천 2동	8	8			
수 영 동	10	10			
망미 1동	14	14			
망미 2동	9	9			
광안 1동	11	11			
광안 2동	9	9			
광안 3동	8	8			
광안 4동	9	9			
민 락 동	10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15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박 현 욱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개정지침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직원(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예방교육 참석, 성희롱 방지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성희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예방업무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피해자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 접수
 2.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성희롱 예방 업무
-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신청)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고충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 또는 고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성희롱예방업무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 ⑤ 담당부서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 ⑥ 담당부서장은 성희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방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에 대하여 고충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분장과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관계자의 신상정보, 피해 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 등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 완료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외부 성희롱 전문가 2명
2. 인사·복무 또는 감사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 공무원 1명
3. 양성평등 또는 여성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 공무원 1명
4. 법무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 공무원 1명
- ④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희롱예방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 피해자 또는 대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위원에 대한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① 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등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제1항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
- ③ 인사업무담당부서장은 행위자가 의원면직하지 않도록 규정을 두어야 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② 구청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희롱 사안 처리 후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 희 룡 고 충 접 수 및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 청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계 장	과 장

성 희 룡 고 충 신 청 서					
접 수 일	200 . . .		담 당 자	(서명)	
당 사 자	신 청 인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대 리 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행 위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별	
상 담 (신 청) 내 용					
요구 사항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징계 등 인사조치() 2. 공개사과() 3. 성희롱의 중지() 4. 기타()				
처리 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 개정이유

- 「여성발전기본법」의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 사항과 여성가족부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의 적용범위와 ‘성희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제2조, 제3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성희롱 예방교육 세부 기준을 정함.(제4조, 제5조)
- 다. 성희롱예방업무 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하고, 고충 신청, 상담 및 조사, 피해자 보호, 비밀유지,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둠. (제6조 ~ 제10조)
- 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외부 전문가 2명 포함 6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11조, 제12조)
- 마.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 징계, 재발방지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정함. (제13조, 제14조)